

농진청은  
농민과 같이 호흡하며  
농민의 요구를 앞장서  
해결해 주는 곳.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전환 재고돼야...

본지 김한웅 부장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서 존속하기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투자와 연구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이은 FTA 체결 등 대외개방의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정부조직으로는 적극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농업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한 근시안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축산 분야만 해도 그렇다.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는 ‘축산과학원’이라는 조직이 있다. 축산과학원의 주요업무는 ▲가축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연구 ▲가축의 유전체 복제·형질 전환에 관한 연구 ▲가축의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 연구 ▲축산환경 및 시설 개선 연구 등을 연구과제로 선정, 시험연구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다.

주요 시험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면서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많은 노력이 동반돼야 가능한 것들이다.

만약 이같은 과제를 출연연구기관으로 이관한다면 과연 지금까지와 같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출연기관으로 전환돼도 농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실직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직 인

개방화 시대를 맞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농촌,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은 항상 농민 옆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수위원회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의 선례를 보면 선뜻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독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나 한국식품연구원 등은 그나마 독창적인 연구영역과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수의 연구원들이 새로운 영역을 찾아 연구소를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물론 연구원을 떠난 대다수는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또는 자기발전을 위해 연구원을 떠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의 연구사, 연구관들은 앞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 두 기관에서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것은 바로 농민과 농촌이 원하는 농업기술, 그리고 소중한 유전자원을 개발하고 보존·발전시키는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곳이며, 농촌농민과 같이 호흡하며 농민의 요구를 앞장서 해결해주는 곳이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양계분야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토종닭 복원사업이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토종닭이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통해 이를 복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져 산업화로 활발히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우리의 고유 유전자원으로 각광받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농촌,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은 항상 농민 옆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왜 많은 농민들이 서울 여의도에 모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계획에 항의하고 번복을 요구하는지 깊이 되짚어 다시 한번 재고해 주기를 인수위 측에 간절히 바랄 뿐이다. 